

# 정치권 선거제도 개편요구 '붐물'

### 野 "지역구도 완화... 권역별 비례대표 등 전면 개혁 필요" 與 혁신위, 선거구 획정안 문제 선관위 일임 등 대안 제시 개헌 논의 맞물려 차기 총선·대선 중대 변수 부상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일 선거구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선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이 같은 선거법 개정은 최근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중대한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31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재인 비대위원은 "큰 틀에서 선거제도의 정밀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차제에 승자독식 선거구제가 조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획정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차제에 중대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비대위원은 "지역패권주의 극복, 공천제도 개혁, 민심 반영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제 확충과 개선 등 모든 개혁안이 민주적으로 논의되고, 투명하게 결정되는 제3자적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당과 통합진보당 등 소수 정당에서

도 현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는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평등권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병훈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지난 31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문에서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며 "비례의원 수를 늘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비정규직,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변모해야 한다"고 현행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친이계 수장인 이재오 의원은 지난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참에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국정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히, 당내에 선

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텃다.

한편,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일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이번 기회에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국회가 심의·의결과정에서 선관위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며 광역 및 기초의원에도 이와 동일한 선거구 획정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혁신위원장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관위에 맡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이정현 "개헌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김동철 "박근혜정부 '검열공화국' 도 넘었다"

### 여야, 대정부 질문 첫날 공방

국회의 31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개헌론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고, '사이버 사찰'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무도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라며 "G20국가 중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정자권 내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개헌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면서 "국민의 완전한 합의 없이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정동래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면서 "경제의 블랙홀이란 논리로 개헌 논의를 차단시키려는 것은 국회를 블랙아웃(대정전) 시키려는 악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사이버 사찰'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했다.

새누리당은 특정 세력이 과도하게 '사이버 사찰'을 문제 삼아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에 '검열 공화국'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공세를 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카카오톡에서 하루 전송·수신되는 게 60억 건이고 1년이면 천문학적 숫자인데 감청했다는 건 100여건이다. 이걸 갖고 '온 국민을 사찰한다, 들어드린다' 하는데 왜 근거도 없이 국민을 불안케 하고 침소봉대하는가"라며 "이건 정치의 품격이 아니다"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도를 넘었다는 말 한마디에 검찰이 마구잡이식 검열에 나서고 사이버 망명이 줄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검박이 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정개특위 즉각 가동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즉각 가동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가라온지

### 황주홍 "광주·전남 '워킹푸어' 비율 전국 최고 수준"

직업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른바 '워킹푸어'가 광주·전남 지역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 비율이 전남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광주시는 광역시 중 최고였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장흥·강진·영암)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지역 EITC 지급 비율이 6.3%로 나타났다.

EITC란 노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

는 제도이다. EITC 지급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근로 빈곤층이 많다는 뜻으로 전남은 전체 68만 5000가구 가운데 4만 3000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전남지역 EITC 비율은 전국 평균 4.3%보다 2%포인트나 높았고 서울(3%) 보다는 2배 이상 높았다.

광주지역도 EITC 비율이 5.4%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았다.



## 野 "당장 전면개편 착수" vs 與 "정기국회 끝나고 하자"

### 정치권 이슈 '선거구 획정' 논의

정치권을 강타한 헌법재판소발 선거구 획정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31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조정하라는 헌재 결정을 놓고 이틀째 갑론을박을 벌였다.

특히 선거구 문제가 워낙 민감한 이슈임을 입증하듯 여야는 획정 논의의 착수 시기부터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은 즉각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선거구 개편 논의에 들어가자며 '드라

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여당은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서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아무래도 정기국회를 통해 주요 국정과제를 입법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의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들을 모두 삼키는 상황을 원치 않는 분위기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실제 블랙홀은 '개헌'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감지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이

날 당 회의에서 '선거구'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주요 당직자들도 최대한 말을 아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의 공식 회의에서 지도부가 전면 나서 선거구 획정 논의의 조속한 시작을 요구하는 동시에 지역 대표성 보안을 위한 선거구제 전면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당장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인구가 적아 지역구가 줄 것으로

보이는 농어촌 지역의 의원들이 주로 선거구제도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녹색 생명산업을 지탱하는 농촌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면서 "조속히 정개특위를 구성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시기 문제에 대해서만 견해를 밝혔을 뿐 앞으로 개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부터 새누리당이 중대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하면 선거구제도의 개편 방향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주영순 "소금산업, 수산업법상 어업에 포함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비례)의원이 소금산업을 '수산업'법상 어업으로 포함시켜 소금산업 종사자의 지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수산업법은 어업을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으로 국한해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소금(천일염)은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고, 소금 관련 산업인 '어업', 소금산업종사자를 '어업인'에 포함하고 있다.

주 의원은 "소금, 천일염은 바다에서 채취한다는 점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과 같이 수산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률안이 개정되면 소금산업종사자가 어떤 대상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돼 일부 농업용 전기와 면세유 공급, 영여자금 혜택 등도 기대할 수 있어 소금생산비용 절감 및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원일기자 cki@목포=고규석기자 yousou@



**K Petro 한국석유관리원**

# 공공기관 매매

● 위 치 | 광주 광산구 도산동 1114  
● 건 물 | 1,657㎡(3층)  
● 토 지 | 2,076㎡  
● 활용용도 | 요양원, 복지관, 유치원, 사무실  
● 매 매 가 | 15억 6백 6십만원

(062) 940-0612  
010-4662-4313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serom.com http://cafe.daum.net/g8111

##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민학·학개론·입법·공법·이강·중개법·중개기·공시법·안규제·세법·임기원

개강 11월 10일

선배 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 학원

합격을 위한

광주새롬학원에서 제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 직업 상담사 특강 (주·야)

새롬 행정고시학원 361-8111

## 수시입출금

# 자신만만자유예탁금

매일 이자 붙는 통장!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쏙쏙!! 재테크의 필수!!

# 최고 연 2.6%

예금자보호 OK! 각종 수수료면제 OK! 급여통장 OK!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OK! 체크카드 할인·적립혜택 OK!  
예금금리우대 적용까지 다 되는 자신만만자유예탁금!!

이자지급 : 300만원이상 금액 단계별 6단계 차등이율 적용  
(300만원 미만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예금자보호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수주료면제 | 수표발행수수료,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스마트뱅킹 청구수수료, sms수수료, 수수료 무료혜택 확대

서양새마을금고

본 점 671-5000  
주유소사업소 720-2880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